

태양광 수익 주민 공유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내년부터 매년 500곳 조성…범정부 추진단 신설

국비 5500억원 투입해 에너지 자립·소득 창출

마을 내 농지나 저수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창출한 수입을 마을 구성원이 공유하는 햇빛소득 마을을 전국에 확산하는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행안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업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합

계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직접 주도해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나온 수입

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그간 개별 부처 차원에서 추진한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을 범정부 차원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 범정부 추진단으로 가장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농림부, 기후부 등 관계부처

와 지방병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며 햇빛소득마을 지정, 평가 등 총괄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정부에도 전담 부서를 두고 주민 사업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지방환경청, 지역별 유관기관 등과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주민의 초기 투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재정·세제 제원도

대폭 확대한다.

2026년 기준 약 45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금융자원을 통해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지역농협, 신협 등 지역 금융기관들도 정책자금 취급 기관으로 참여해 마을공동체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정부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주민의 자부담분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재생에

너지 창업과 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

햇빛소득마을의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는 국산품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마을 3만8000여 개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매년 약 500개소 이상의 햇빛소득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국비 약 5500억원을 투입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대한상의 방문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 최태원 회장 등 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남

서삼석,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농어민 삶 불평등 개선 집중…제도 개선 이끌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이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8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서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쿠팡 등 이커머스 불공정 거래 문제, 농어촌 안전 사각지대, 공공기관·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현장과 데이터에 기반해 집요하게 추궁하며, 실질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끌어 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20년부터 매년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해 온 서 의원은 올해에도 윤석열 전 정부의 계엄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어민의 생활난 목소리를 취합해 “농정 정책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농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쿠팡이 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도 ‘섬 추가배송비’를 부과해 온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다리가 놓여 사실상 육지와 다름없는 지역에까지 섬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자 기만행위”라는 지적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판매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정산 지연 구조, 농어촌 상생기금 미출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기하며, 이커머스 플랫폼이 농어촌 상생에는 외면한 채 이익만 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사회적 책임 문제를 공론화해 개선을 끌어 냈다.



서삼석 의원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또 기후위기 속 100년 된 흙독과 방치된 노후 저수지 붕괴 위험을 현장 자료로 제시했고, 정부는 관련 시설 정비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점에 착수했다.

농어촌 빈집과 인력난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종합 계획 부재를 집중 질의하며 국가가 직접 관리할 것을 촉구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과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해양경찰의 순직 사고 보고 체계 부실, 13년간 조계기 도입이 전무한 문제, 헬기·항공기 운영률 저하를 조목조목 짚으며 원해 수색 구조 성공률이 5%에 불과한 현실을 공개했다.

농어촌공사 직원 자녀수당 환수, 농협 은행의 비농업인 대출 풀림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 수협이 징계 무마 및 내부 부조기 관행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구조적 문제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쟁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특히 쿠팡을 비롯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 농어촌과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대이터와 증거로 제시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여, ‘내란재판부 설치 2심부터’ 수정안 마련키로

추천위 외부관여 배제하기로
12·3 계엄사태 2차 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해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애초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민주당은 논란을 불식하고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관련 법안을 수정할 방침이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안에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을 수정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기로 뜻을 모았다.

기존 법안명인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했다.

한편 민주당은 12·3 계엄사태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이유는 ‘확실한 내란청산’을 바라는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상병·내란 특검에 이어 오는 28일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의 결과까지 분석한 뒤 종합특검의 조사 범위 등을 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의혹, 심우

정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의 계엄 연루 의혹,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조사범위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종합특검법안 처리는 이르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문규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물리적으로 연내 처리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며 “이번 주에 상황이 바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대로선 (그렇다)”라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위’ 출범

서동욱 의원, 위원장 선출
“공공 개발 이익은 도민에게”

전남도의회가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개발이익 환수 논란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서동욱 의원 (더불어민주당·순천4)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신대·선월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제기된 개발이익의 과도한 민간 집중 문제와 행정 절차의 투명성 논란, 공공성 확보 미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발이익 환수 방안 마련을 목표로 활동할 예



전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이다.

서동욱 위원장은 “순천 신대·선월지구는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추진된 공공성이 강한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도민에게 충분히 환원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며 “특별위원회 출범은 지금까지의 개발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근본적으로 되짚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개발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며 “공공이 참여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반드시 공공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앞서 지난 7월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순천 신대·선월지구를 비롯한 전남도 개발사업 전반의 이익 환수 실태를 문제 삼은 바 있다.

또한 대표 발의한 ‘전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이 지난 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택지 조성사업 전반의 행정 절차 적정성 점검을 비롯해 개발이익 산정과 환수의 타당성 검토,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 등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점검, 전남형 개발이익 환수 기준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서동욱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진남 부위원장(순천5), 강경일(광양2), 한춘욱(순천2), 신민호(순천6), 김경희(순천3), 김경이(순천8), 최동익(비례), 정영균(순천1), 한숙경(순천7)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AI전환 대응 ‘미래차 혁신 협의체’ 가동 산·학·연·관, 車·공장·국방차 등 3개 분과 대응책 모색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빠르게 변하는 미래차 산업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광주시 미래차 혁신 협의체’가 출범했다.

광주시는 16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과 함께 ‘미래차 AIDX 혁신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AIDX는 인공지능 활용 시스템 제어로 차량, 제조, 국방 등 산업 전반을 혁신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출범식에는 광주시,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국방기술진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조양정밀공업(주), 코비코(주), DH오토웨어(주), 한국알프스(주), (사)인공지능산학연협회 등에서 협의체 위원과 업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자동차 산업이 급속하게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미래차 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협의체는 인공지능 기반 자동차(AIDV)·공장(AIDF)·국방자동차(M.AIDV)

등 3개 분과로 구성, 각 분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 협의체 구성원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자동차 제조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퍼지컬 AI 기반 제조혁신공장 실증 지원’을 2027년 신규 국비 과제로 제안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정구민 국민대학교 교수가 ‘글로벌 인공지능 기반 자동차(AIDV) 산업 동향’ 기조발표에서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기술이 자동차의 주행뿐 아니라 편의·안전·감성 분야까지 사용되고 있음을 제시했다.

이어 이승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센터장은 ‘광주 AIDX 산업 방향’에 대한 기조발표에서 단순공정 위주의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구조를 분석하며 제조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자들은 광주시가 인공지능 기반 자동차(AIDV) 기술 확장에 발맞춰 기존 자동차 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하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자원·인증 체계를 마련하는 등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